

환경관리공단, 댐 상류 하수도 추가사업 추진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희)은 오는 2010년까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댐 상류 28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댐 상류의 하수도 추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역점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해 하수도 분야에서 취약한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시설에 단기간 내 집중 투자함으로써 하수도 보급율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일선 상수원 지역의 근원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관리공단은 댐 상류 지역 하수도 보급율을 '03년 27%에서 2010년까지 75%로 상향 재조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충주댐에 3천2백88억과 대청댐 2천9백6억원, 남한강에 1천9백25억원을 들이는 등 총 1조1천9백4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소양강댐 등 7개 다목적 댐이 조성되는 28개 시, 군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하수도시설 개량과 하수관거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며 유역 내 환경 기초시설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입찰 안내서 협의와 심의에 이어 4월에는 사업을 발주, 전격 공고키로 했다.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의 접목으로 효율적인 시설 설치는 물론, 운영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개념의 통합 하수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신 개념의 하수도체계 확립이 기대된다.

사업의 효과는 유역 내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과 상수원 수질개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급인력과 시설 보수인력의 공동운영 기능에다 시설 운영의 표준화, 기술력의 공유로 시너지 효과도 얻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 공동구매, 통합관리를 거친 하수처리원가의 절감을 비롯 실험실, 관리동, 탈수시설 등의 중복 설치를 해소키로 했다.

관리공단 상하수도시설2차 관계자는 "시설설치비, 유지 관리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유역 환경 관리감시 체계를 구축, 선진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

다"고 말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올해 민간단체들의 수질보전과 감시활동 지원사업으로 모두 49개 단체, 52개사업을 선정해 4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은 낙동강유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63개단체에서 신청한 104개 사업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간의 중복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별로 경남이 14개 사업에 9천5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13개 사업에 7천481만여원, 경북 12개 사업에 9천318만여원, 대구 8개 사업에 6천470여만원, 울산 1개 사업에 919만여원 순이다.

또,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가 유역공동사업 4개 사업에 1억3천784만여원을 지원받는다.

유형별로는 환경문화행사가 18개 사업 1억9천713만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홍보 18개 사업 1억7천498만여원, 수질보전감시활동 13개 사업 7천523만여원, 조사연구 3개 사업 2천2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 전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낙동강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민간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리기다소나무 이용한 틀재옹벽 개발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리기다소나무 간벌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과 조화된 고내구성의 중력구조체인 틀재옹벽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간벌재를 균일한 크기의 원주(90mm)로 깎고 우물정(井)자형의 틀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며, 그 틀

의 안쪽에는 옹벽을 만들면서 굴착한 토석을 채운 중력 구조체로 안정계산에서도 콘크리트 옹벽에 버금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틀재옹벽의 시공은 콘크리트 옹벽과 같이 거푸집과 양생기간이 필요 없고, 시공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약 30배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재료가 가볍기 때문에 자재운반이 불편한 곳에도 시공이 가능하므로 긴급재해복구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틀재옹벽은 토목용도로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리기다소나무는 다른 수종보다 방부제 주입이 매우 잘되며 가압식으로 방부처리를 하면 틀재옹벽 부재로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보장되므로 틀재옹벽 부재로 적당하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으로 내부를 채우므로 환경파괴가 없으며, 시공한 사면에 식생 도입이 4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틀재옹벽(2m×10m) 시공 시 콘크리트옹벽보다 설치비용이 30% 상승되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공사에서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노무비의 상승을 꾀고 있다.

틀재옹벽은 콘크리트옹벽 보다 노무비가 164%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노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유리해 질 수 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그 축조기술을 실용신안 출원과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관리청 관내 국유림 입도와 홍길동 테마파크(전남 장성군) 관광지에 목재옹벽으로 금년 5월중에 시공 및 축조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교토의정서, 한국수출 영향 엇갈려

교토의정서 발효는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기업들이 환경보호기술을 강화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

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로 EU 역내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산업의 비용상승으로 한국 및 제 3국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EU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부과 업종의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제 3국 수출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및 환경요건 강화로 기준 미달 제품의 EU 시장 진입이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기업은 이를 중국, 동남아 제품 등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EU의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 강화 등으로 인해 냉매제 및 전력 사용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가 TV 수상기, 수신디코더, 휴대폰충전기, 오디오, VCR 등 5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소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반면 미달 기업들은 EU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명기하는 '환경마크제'나 '이산화탄소 등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기준 미달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업체들은 배출가스량이 적은 EU 선진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나 미래형 환경자동차의 개발 여부에 따라 수출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판매가능

앞으로 태양광발전 등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설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전력량의 계량과 전력요금의 정산절차등 이와 같은 거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규정을 지난 2월 7일 제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된다.

한전은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하여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태양광의 경우는 716.4원/kwh)으로 정산하고,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설비용량 3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으로부터 받아온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기존의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여야 했으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정부는 시민단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건의를 수용,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금번에 절차규정을 고시함으로써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였다.

환경부, 생태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지정

환경부는 강원 삼척시 도계읍 너와마을, 울주군 언양읍 대곡마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마을 등 10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서울 강남구 양재천, 경기도 구리시 장자못생태공원 등 4개 지역을 복원 우수사례로 신규 선정하였다.

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지역주민이 자

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거나 주민의 노력으로 자연 친화적인 생활양식 등을 가꾸어 나가는 마을로서, 대부분의 마을이 20~50호 정도의 전형적인 농촌 또는 산촌 마을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 주변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많은 종류의 야생동·식물이 더불어 서식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은 유기농법실시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연보전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을 가꾸며,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마을이다.

복원우수사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복원한 결과,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말한다.

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지정제도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14개 지역을 지정한 이래 2002년 15개 지역, 2003년 13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 14개 지역을 신규지정 12개 지역을 재 지정하므로써 총 54개 지역이 운영된다.

선정과정은 광역자치단체의 1차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신청된 28개 지역에 대하여 '심사평가위원회(임승빈 서울대학교수 등 학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12명으로 구성)'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너와마을은 육백산(1,300m)아래 해발 600m에 위치한 전통 산간오지의 자연마을로 육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멧돼지, 고라니, 꿩, 곤드래, 미추, 송이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주민협의체인 너와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 너와집 보전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등 자연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문화 활동인 송이따기 체험행사, 두메산골 새생명체험행사 등 지역 문화활동을 활발

히 하고 있다.

서울 양재천은 관악산,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탄천과 합류한 후 한강 본류로 흐르는 한강의 지천으로 원래 사행하는 하천이었으나 70년대 개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직강화, 콘크리트화 되었고, 각종 생활하수 등의 무분별한 방류로 하천 수질은 5급수로 전락하여 악취와 물고기 등이 살 수 없는 하천이었으나,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쪽 호안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조성, 수질정화시설 설치, 천변저습지, 수생식물 및 초화류 식재,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여 2급수의 수질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복원된 우수사례이다.

이와함께 지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로 선정된 14개 지역의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중 광역자치단체의 훼손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부에 재지정을 신청한 12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없이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친환경상품 개발 애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친환경상품 개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on-line) 애로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실무 담당자와 애로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20,000여건의 관련 특허 및 기술정보와 각종 설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용방법은 산업자원부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http://recycling.ats.go.kr>)에 접속, 상단 메뉴의 '지원업무'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상품 개발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기술지원 및 관련 정보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개방실험실 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해 268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32건의 국가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을 뿐아니라, 아울러 26회 1,820명에 대해 친환경상품 개발기술 교육도 실시하여 기술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용 시트(sheet, 도아·트렁크 트립류) 개발업체인 K기업의 경우,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신재로 제조한 제품과 비교시 90%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케 되어 2.5배의 생산성 향상과 30여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온라인 애로기술 지원시스템 구축은 7월 1일 시행 예정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정부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뿐아니라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재의 애로기술 지원이외에도 친환경상품을 개발코자 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친환경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사업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건교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 시설 포함

환경부와 건교부는 지난 2월 3일 공동으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를 열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심의 확정하고 지난 2월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을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학교시설 친환경 인증기준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법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및 학교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실내를 구성하는 자재에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여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며,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의 영향을 받아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실내 소음도를 평가하고, 교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며, 녹지공간 조성 및 옥상녹화와 생태학습원 조성 여부를 평가, 기존의 삭막한 회색빛 콘크리트의 학교시설을 초록빛 수풀이 우거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의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향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평가하는 항목 등을 담고 있다.

참고로, 인증기준에는 리모델링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의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건물의 개축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행 결정은 향후 학교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金東晉)는 지난 16일부터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한국이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2008 - 2012년)에는 제외되었지만, CO₂배출 9위국으로서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높아 2차 감축기간(2013 - 2017년)에는 의무부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응 자동차산업 대책반' 운영을 통해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전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가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품(차량)부문에서는 경유승용차 보급,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협회는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기술개발과 조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기술개발비(R&D 자금)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선도

환경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원순환형 사회' 구조를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생활속에서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일상화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시행('05.1)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천연골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용 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업무는 60 ~ 70년대 위생 또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체제하에서 쓰레기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70년대 후반 환경보전법(1978) 제정 및 환경청(1980) 발족으로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개념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1986년 폐기물관리국의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폐기물 관리업 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고, 이때 부터 폐기물의 단순처리에서 재활용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 폐기물자원국으로 개편 및 1995년 쓰레기종 량제 전면 시행으로 폐기물관리정책이 '자원화' 및 '감량' 쪽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 인 정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로 금번 직제개편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연구부'는 「자원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는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환경연구소 에는 연료의 품질등급 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연구 등 교통환경분야의 업무가 추가될 계획이며, 환경정책실 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업무, 자연보전국에 자연경 관심의회 운영업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환 경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를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은 지난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와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국내 통계체제를 잘 갖추고 국제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토의 정서 발효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 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나 에너지 절약과 에너 지이용 효율 향상 추진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수소경제 혁명에 대해 국가 에너지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기술 시장을 선점 하는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말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사업장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업종·기업별 DB를 구축하는

등 통계체계를 정비하고 올해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저감 잠재량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 협상대책을 준비중”이라 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호주, 크로아티아 등이 비준을 거부해 의무부담국가가 35개국으로 줄었지만 EU, 일본, 영국 등은 이미 내부체 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당장 성급한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라 도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국내 통계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적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중소기업 재활용업체 현장애로기술 지원 절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중소기업 재활용업체 들의 낙후된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의 효과분석 등 제도개 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활용기술지도 는 민간 재활용업체로부터 접수된 현장애로기술을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하여 분야별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 들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19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재활용업체에 외부 전문 기관의 기술지도 등 기술개선 사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 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외에 다른 외부 전문기관의 기 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6%만이 경험 이 있다고 밝혀 중소기업 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이 용시 가장 큰 부담’은 응답자 중 73%가 소요비용을 택했 고, ‘공사의 기술지도사업 참여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86%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